

김 총리 “설 연휴 고향방문 자제” 당부

대국민 담화... “지역 간 이동은 불길에 기름”

각 분야 대응계획 수립... 방역 적극 협력 요청

오미크론 변이가 코로나19 우세종이 돼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설 연휴 기간 이동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부득이하게 고향을 방문해야 한다면 3차 백신 접종과 진단 검사를 반드시 해줄 것도 요청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설 연휴 특별 방역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설 연휴를 방역의 중대 고비로 보고 다시

금 이동 자제 등 정부의 강력한 방역 대책에 따라 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김 총리는 담화에서 “정말 송구스럽지만, 이번 설에도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고향 방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설 연휴에 많은 사람이 지역 간에 활발히 이동하고 서로 만나게 되면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해 추석만 해도 연휴가 끝나자마자 확진자 수가 38%나 급증한 일을 생생히 기억한다”면서 “설 연휴를 안전

하게 보내야만 우리는 오미크론과의 싸움에서 승기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특히 “본인이나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3차 접종을 마치지 못하셨다면,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고향 방문을 피해 달라”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설 연휴기간 접촉 면회가 금지된다”고도 했다.

김 총리는 “불가피하게 고향을 방문해야 한다면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 3차 접종을 마쳐달라”면서 “출발 전에 꼭 진단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많은 사람이 봄비는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고, 휴게소에서는 최소한의 시간만 머물러 달라”면서 “고속도로 휴게소 등 9곳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추가 설치하는 만큼 귀성길에 조금이라도 의심

이 들면 검사소를 찾아달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는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일상으로 복귀하기 전에 반드시 진단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우리보다 먼저 오미크론을 경험한 나라의 경우, 그 비율이 60%를 넘는 순간부터 확진자가 폭증하는 경향을 뚜렷이 보여준다”면서 “(오미크론의) 위험도가 낮아도 짧은 시간에 확진자가 폭증하면 의료현장에 과부하가 걸린다”고 우려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의료, 교육, 교통, 소방, 경찰 등 각 분야 대응계획을 수립해 오미크론에 대한 준비를 진행해 왔다”며 “지역 의사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력도 요청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추경호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내달 7일부터 예결위 추경 심사

여야가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2월 임시국회 소집에 24일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임시국회 회기를 이달 27일부터 30일간 하기로 합의했다.

상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는 2월 3일~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는 7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단,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은 2월 8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다시 합의할 예정이다.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은 27일 오후 개회식 직후 실시하기로 했다.

한병도 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2월) 14일까지 (추경안)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며 “관련된 것은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추경호 수석부대표는 “15일부터 본격적인 대선 선거운동 유세가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2월 14일을 잠정 이야기한 것”이라며 “날짜를 정해놓고 심사에 임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추 수석부대표는 “예산안이 국회로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엄밀히 검토하고 저희가 당초 정부 측이 요구했던 사안에 대해 여당 정부 측과 계속해서 협의 협상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측근들 백의종군 선언... 지지율 정체 ‘승부수’

대선 코앞... 86용퇴론 ‘고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최측근 의원 그룹인 ‘7인회’가 24일 백의종군을 선언하며 여론 내 인적 쇄신에 불을 댕겼다.

가신 그룹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것으로, 이 후보의 지지율 정체를 돌파하기 위한 쇄신책의 일환으로 던진 승부수로 보인다.

아울러 당내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용퇴론마저 고개를 들고 있어 대선을 코앞에 두고 여론에 적잖은 인적쇄신 바람이 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7인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저희 7명은 국민이 선택해 주실 이재명 정부에서 일할 임명직을 맡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회견에는 7인회 좌장 격인 정성호 의원과 당 사무총장인 김영진 의원 등 6명이 참석했다. 작년 9월 의원직을 잃은 이규민 전 의원은 불참했다.

이는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진노(진노무렵) 핵심 참모 출신 인사 9명이 선대위에서 전격 사퇴한 것과 흡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 양정철 전해철 이호철 등 이른바 ‘3철’을 비롯한 9인방의 퇴진은 안철수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 교착국면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승부수 건 것으로 해석됐다.

7인회 인사들의 이날 선언은 선대위직 사퇴는 아니었지만 집권 시 2선으로 후보



울산 방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24일 UNIST(울산과학기술원) 이차전지 산학연 연구센터를 방문해 청년연구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겠다는 공언이었던 만큼 적잖은 무게감을 지녔다는 평가다.

또한 이는 당내 86 용퇴론과 맞물리면서 여론 내부의 도미노식 인적쇄신 움직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7인회의 이날 백의종군 선언 자체가 추가 인적쇄신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것이다.

정성호 의원은 이날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86 용퇴론에 대해 “특별히 생각해보지 않았다”면서도 “국민들이 민주당을 어

떻게 보는지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뇌해야 한다. 국민 앞에 처절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당 정당혁신추진위가 혁신안으로 내건 ‘3선 연임 초과 제한’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동참 여부는 각자 결단의 문제”라며 “저희의 충정을 헤아려 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당과 선대위가 개별 의원들에 ‘강요’할 수는 없지만 쇄신의 흐름에 참여해 달

라는 메시지로 해석됐다. 실제로 재선 친문인 김종민 의원이 거론한 ‘86 용퇴론’도 서서히 힘을 받는 모양새다.

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586 용퇴론이 나온다. 집권해도 임명직 맡지 말자는 결의”라면서 “그러나 임명직 안 하는 것만으로 되나. 정치를 바꾸지 못할 것 같으면 그만두고 후배들에게 물려주든지”라고 적었다. /연합뉴스

송영길 “‘최순실 국정농단’ 경각심

경남선대위회의... “무속에 의존 사람에게 국정 맡겨서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4일 “어떻게 만들어놓은 민주주의이고 경제발전인데, 범죄가족단 혐의를 받는 사람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컨벤션센터 301호 회의실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선거 경남대선한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측을 겨냥해 “더구나 무속에 의존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국정을 맡길지 심히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상 윤 후보의 지지율을 볼 때마다 민주당이 반성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며 “윤석열은 우리 정부에서 검찰 총장에 임명돼 정치적으로 성장한 사람인데, 인사청문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거짓말이 드러났는데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통과시킨 데 대해 반성한다”라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지방선거를 위해서도 절대 우리가 이겨야 할 선거”라며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보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승리하자)”고도 부연했다. 윤 후보의 부산·경남 공약과 관련해서는 “그 공약들은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선대위 회의에 이어 경남도당 사무실에서 대학생들을 만난 뒤 창원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역상공인 대표들과의 간담회에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송 대표는 “공공기관(지방) 이전을 꼭 해왔고 이재명 후보도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발표했는데, 어떤 기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는 집행하면 TF를 만들어 지역 특성·산업과 연관되는 공공기관 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상공인들은 이날 송 대표에게 공공기관 창원 이전,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 추진 등 정책을 공약해줄 것을 건의했다. /연합뉴스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의료기관 세탁물 전문처리 기업!!]

호남 최대 최첨단 세탁시설 완비,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으로 철저한 품질관리, 효율적인 관리로 의료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세탁 전문 시스템을 갖추어 친환경 세탁 문화를 위해 연구와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치(연속) 세탁기



다림시설



운반카트 고온스팀 살균



(주)백양실업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신기길 93 T. (061)392-7900